

DAVID A. SHLAPAK

원자폭탄을 해체하지 않는 방법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접근법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아직 드러난 것이 많지 않으며, 최소한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호로 판단하건대 새로운 행정부는 북한(공식적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핵무기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 정부의 접근법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압박의 극대화든 전략적 인내든, 미국의 정책은 사기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 구타한다는 오래된 농담같은 태도를 고수해왔다. 실제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똑같은 미친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평양을 압박하면 평양 측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기대는 확실히 그런 암울한 진단의 대상이 되고야 말 것이다. 아주 희박한 진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실패를 변함없이 무시하는 신기한 사고방식은 현실적인 상황 평가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고, 미국의 우선 과제는 흐름을 역행하는 것에서 흐름을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¹

여기서 제시하는 주장은 단순하며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워싱턴이 북한의 핵 야욕을 처리하고자 했던 시도, 전 세계가 겪은 핵무장 강대국에 대한 경험, 국제 관

바이든 팀의 확실한 정책 선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 말기에 우세했던 접근방식에서 큰 변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계와 경제 이론 등을 고려할 때, 분쟁이나 평양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핵무장을 한 북한을 억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1945년 이래 핵 무장을 한 모든 강대국에 대해서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억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실패, 기억 지움, 반복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한 전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공식적 언급을 보면 이미 전에 나왔던 정책과 같은 정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 2021년 3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이른바 쿼드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 비

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O'Carroll, 2021).

-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당시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두 동맹국이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라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백악관, 2021a).
- 2021년 5월 바이든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같은 목표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표현은 다음과 같이 약간 달랐다. 상호 목표는 계속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유지한다(백악관, 2021c, 강조 추가).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백악관, 2018)에서 나온 공동 선언의 문안과 유사하지만, 이 발표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북한만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중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여 바이든-문재인의 선언과 어느 정도 대비되는 싱가포르 회담 전으로의 회귀를 보였다(북대서양조약기구, 2021).

바이든 행정부의 확실한 정책 선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도 이미 10년 전 적용하였다가 실패한 후 되돌렸던 방식인, 트럼프 정부 말기에 우세했던 접근방식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들과 다른 북한 정책을 보여주 고자 했지만,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전문가인 브루킨스 연구 소의 Robert Einhorn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 실패를 했던 두 가지 접근법 사이의 중도를 택하는 효력이 증명된 외교 기법"을 채택하였다고 그 특징을 설명했다(Einhorn, 2021). 그는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을 평양과의 극적인 '일괄 타결'을 노린 절망스러운 모색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버락 오 바마 전 대통령의 팀이 취한 접근법은 "아무 것도 주고 받 지 않는" "전략적 인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은 Van Jackson이 말 했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대한 요구와 억지력과 다양한 형태의 비폭력적 압력을 결합한 대북 대결 태세에 기반한다 (Jackson, 2019, p. 594)

이러한 용어로 볼 때 트럼프가 자신의 "핵 버튼"이 "훨씬 더 크다"는 표현과 김정은이 "리틀 로켓맨"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Gambino, 2018), 트럼프의 초기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은 전임자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벗어났다기 보다는 솔직하게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중기에 "좋은 친구" 김정은과의 고도로 개인화되고 세 간의 이목을 끄는 정상회담을 특징으로 하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텔레비전 보도용으로는 좋았지만, 북한 측 으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임기 말 트럼프 행정부는 독특하고 풍성한 수사적 표현과 제재조치 추가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강압적인 전략으로 복귀했다.

실패의 비결: 제재 조치, 강압, 그리고 전망 이론

지금까지 북핵의 딜레마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없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2021년 4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합동회의 발표에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안보와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언급했다(백악관, 2021b). 이것은 이란의 완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북한의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함께 묶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수사적 표현을 되풀이한 것이다.² 두 국가가 오랫동안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공통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을 같은 범주에서 말하는 것은 아이를 가질까 생각하는 것과 이미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 두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범주를 잘못 정한 것이며,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추가 제재조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늦추는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제재조치가 북한에서 실제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는 긴 논쟁이 이어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체계를 개발해 왔고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이 사실을 고려하여 본인의 주장은 비핵화라는 키메라를 소독 없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1)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공격하거나 강압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2) "무언가를 주고 받는" 기초에 따라 단계별 협상을 이어가면서 협력을 통해 추가 개발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제재 조치의 전반적인 효과라는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회과학자들이 리스크 경향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외교 정책의 도구로서 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한 정치 과학 문헌의 견해는 엇갈린다. 제재 조치가 의도한 결과를 일관적으로 달성함을 나타내는 설득력 있는 증거나 주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제재 조치가 민주 정권에 대하여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 적용할 경우 비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Brooks, 2002). 영향력을 가진 커뮤니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스마트한 제재조치나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제재조치는 "인상적인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Drezner, 2003). 정량적인 분석을 하면 제재조치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관념이 강화된다(Rarick and Han, 2010).

물론 북한의 경우 분석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은 국가 중 하나"의 핵에 대한 의도를 바꾸려고 15년 이상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갖고 있다(Bartlett and Shin, 2021).³

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한 주장이 궁극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면, 북한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강압이 누군가 원할 수 있지만 아직 하지 않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와 이미 한 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강제⁴의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개념에 있다. 미국

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지하고자 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자 한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압 이론을 공부한 이들은 오래 전에 강제가 억지보다 훨씬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노벨상 수상자이자 중요한 사상가인 Thomas Schelling의 말에 따르면 "억지하는 것이 아닌 강제하고자 하는 위협을 하려면 만일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할 때까지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상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처벌이 충분히 집중적이거나 광범위해야 한다. 무게가 10파운드인 물체를 5파운드의 힘으로 움직이려고 아무리 오래 노력하더라도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 억지는 대상에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억지를 가하는 측은 대상의 행동을 방지하고자 한다. 강제를 가하는 위협은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 위협은 그 행동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단순히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적인 압박을 멈추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비핵화의 완료만이 논리적으로 압박이 끝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로 지뢰밭을 깔아놓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억지와 달리(Schelling, 1966, p. 72) 강제하는 측은 위협 행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한 당사자가 상대를 영원히 억지하면 만족하는 억지는 정해진 기간이 없는 반면, 강제는 기한과 긍정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로 억지는 대상이 평판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는다. 이솝 우화의 여우처럼 대상은 언제나 원래부터 실포도를 먹을 생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강제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위협 앞에서 가시적이고 잠재적인 굴욕감을 주는 양보나 후퇴를 해야 한다.

Schelling은 이상적인 강제 조치를

일단 시작한 후 곧 뜻을 따르게 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뜻을 곧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를 극대화하고 이를 거스를 수 없으며 조치를 시작할 당사자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뜻에 따라 경우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고 이를 상대가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Schelling, 1966, p. 89)

독자들은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이 이러한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해 동안 국제 사회가 특정 행위자에게 부과한 것 중 아마도 가장 강력한 징벌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한 후 평양이 요구에 따라 움직임이 부족한 것은 "큰 피해"가 충분히 가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구제 조치를 제공하기 전에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일정"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이 제재 조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북한은 요구에 따르더라도 제재 조치가 해제될 보장이 없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압 이론에서 도출된 이러한 평가는 진화하고 있는 분야인 행동경제학에서 찾아낸 가장 심오한 발견 중 하나인 *전망 이론*으로 뒷받침된다. 이 이론은 사람이 현재와 관련하여 자신의 미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그러한 평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결과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에

개인은 아직 갖지 못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보다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다. 개인은 아직 갖지 못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보다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Kahneman and Tversky, 1979의 사례 참조).

이란은 전망 이론에서 *이익 영역*에 위치한다. 즉, 미국은 이란에게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다. 전망 이론은 이러한 태도가 이란이 핵무기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의지를 줄인다고 말한다. 반대로 북한은 *손실 영역*에 위치한다. 즉, 미국은 북한에게 이미 가진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상태는 훨씬 위험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란의 핵무기 추구 욕구를 저지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심각한 경제 제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오랜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김정은의 핵무기는 존재하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복지에는 분명 무관심한 채 주민들을 그러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애초에 국가는 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핵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심각한 경제 제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오랜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
김정은의 핵무기는
존재하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핵무장을 하려는 동기

핵무기를 개발한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같은 이유를 갖고 있다. 바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다음 목록은 각각의 상황을 검토한 것이다.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원자폭탄을 개발했다.
- 소련은 미국이 단독으로 원자폭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자폭탄을 개발했다.
- 미국과 소련은 핵분열 무기에서 핵융합 무기로 발전시키며 상대가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 영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전후 대영제국이 쇠퇴한 후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며, 실질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바르샤바 협정을 저지하기 위한 자세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프랑스 역시 위신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확대된 전쟁 억지 능력에 대한 의심을 상쇄하고 파리가 보다 독립적인 안보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점점 더 소원해져가는 소련과 오랜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 양쪽으로부터의 위협을 인지한 중국은 모스크바가 1950년대에 베이징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열망을 지원하는 것을 철회한 후에도 핵 개발을 계속했다(Lewis and Xue, 1991 참조).

- 이스라엘은 자국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보이는 아랍 적대 세력에 직면해서 생존을 보장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는 북한의 행동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 적대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 둘러싸인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소규모 핵무기 보유를 추구했으며, 남아공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그 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초강대국이 개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흑인 다수 통치를 위한 모멘텀이 만구축되고 국경에 대한 위협이 감소하자 F. W. de Klerk 정부는 비축된 무기를 해체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은 1990년대 초에 완료되었다.
- 인도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자국의 위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이나 파키스탄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제조했다.
- 이에 파키스탄은 당연히 핵개발에 나섰다.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더 부유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남쪽의 한국을 억지하기 위한 무기를 확보하고 특히 평양의 정권 교체를 노리는 미국의 엄원에 대항하기 위해 엄청난 국제적인 압박을 극복해왔다.

이 중 일부 경우에 자부심과 위신이 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각국은 안보 면에서 설득력 있는 이유를 확인했다.

북한의 경우 외부 관찰자가 북한 지도자들의 우려를 현실적이라고 또는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 정권이 여러 해 동안, 어쩌면 사상 최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며 억압적인 정권이었던 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이 필사적으로 평양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는 규범적인 문제나 미국의 선호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현실의 문제이다. 북한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이 문제에서 깨뜨릴 수 없는 핵심이다.

김정은 정권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에서 부인할 수 없고 우려되는 교훈을 얻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각국 리더십은 미국(그리고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해 무너졌다. 김정은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정권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 위협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들 세 나라 모두에게 결여되었던 것은 미국의 침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었다. 북한의 제한된 핵무기와 신뢰할 수 없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미국에서 깊은 불안감을 촉발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실제로 그러한 억지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의 적대감이 지속된다는 김정은 정권의 뿌리 깊은 인식을 감안할 때, 그는 워싱턴 측에서 아주 확고한 안보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보호 수단을 약화시킬 양보를 제안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오직 네 개의 국가만이 존재하는 핵무기를 포기했으며 각 사례에서 보면 결정의 배경에는 다양한 정권 교체가 있었다 .

지금까지 오직 네 국가만이 기존의 핵무기를 포기했으며(많은 국가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종료했지만), 각 사례에서 보면 결정의 배경에는 다양한 정권 교체가 있었다. 스스로 만든 무기를 포기한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남아프리카가 유일하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나머지 3개국은 소련 붕괴 당시 소련의 핵무기를 물려받은 소련의 승계국이였다. 러시아의 장기적인 의도를 두려워한 우크라이나는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 보유량을 러시아에게 내주기 전에 국제적인 안보 보장을 받고자 했다. 그 결과 러시아, 영국, 미국 정부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러시아 연방, 영국 및 북아일랜드, 미국, 1994).

우크라이나(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포함)에 제공된 여섯 가지 보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기존 국경 내에서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한다.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제적 압력을 자제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 세 가지 약속을 모두 위반하고 두 번이나 침공까지 하였다.

이 글은 서방이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할 수 있었는가 또는 대응을 했어야 하는가를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이끌어냈을 어려운 교훈은 일반적으로 서구, 그리고 구체적으로 워싱턴으로부터의 서류 보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자폭탄을 해체하지 않는 방법

미국의 현재 접근 방식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즉, 오바마의 아무 것도 주고 받지 않는 전략과 트럼프의 모 아니면 도의 접근 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안보 보장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양이 핵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협상 전략은 거의 확실히 수명이 다했다. 국제 관계 학술계가 채택한 경제이론(그리고 진화생물학)의 용어를 이용해보면 그러한 요구는 워싱턴이 대화를 제공하는 **값싼 신호**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게는 핵 무장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라는 **값비싼 신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평양의 관점에서 이것이 좋지 않은 거래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제재 조치가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희망 사항이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관련 제재 조치는 2006년 최초 핵심협약부터 내려졌다. 이때부터 미국은 압박을 높여가며 북한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핵 정책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북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군사력을 약화시켰으며 일반 북한 주민의 고통을 심화시켰다. 또한 비교적 귀하게 자란 엘리트들의 생활에도 다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제재에 따라 핵 분야에서 이루어진 진전은 조금도 없다. Haggard와 Noland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정권은 인구의 3퍼센트에서 5 퍼센트 정도가 사망한 기아에서도 살아남았다(1990년대 말). 그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올 (제재) 조치에 주요 당사자들이 협조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Haggard and Noland, 2017)

다시 말해서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재 조치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좋게 말해서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개입해서 어떻게 든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베이징이 북한을 성공적으로 비핵화한 후 이루어질 평화를 환영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국이 내부 불안정에 시달리는 북한 또는 북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선호한다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중국 영토와 미군이 주둔한 한국 사이에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호적인 완충국의 붕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베이징은 한국의 통일 여부, 시기, 방법에 대해 일종의 거부권을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제재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백일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력해지자 중국은 평양의 생명줄이 되었다. 2005년 중국은 북한의 수입에서 46퍼센트를 차지했고 북한의 수출에서 37퍼센트를 차지했다. 2019년 이 수치는 각각 96퍼센트와 67퍼센트가 되었다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업데이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 국경의 봉쇄조치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이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연료, 기타 물자의 공급을 위해 의지해온 "공식적인 밀수"를 어느 정도 다시 허용하였다 (Whong, 2021). 베이징은 오래 전에 김씨 일가의 터무니 없는 행동에 질렸지만, 중국이 북한 정권이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조장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 핵 능력이 지속돼온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핵 능력에 대처함에 있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이다.⁴ 미국이 북한에서 분쟁이나 위험한 체제 붕괴 없이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는 한 미국 지도자들은 북한과의 안정적인 연계 관계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다자간 노력 구축에 초점을 맞춘 핵심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⁵

중국의 유사점

일부 관측자들은 북한을 약당이자 틀림 없이 잔혹한 국가로 간주하여 저지할 수 없음을 걱정한다. 이것은 70년 동안 한국 전쟁의 재발을 성공적으로 억지해온 국가에 대한 주장으로, 이상하게 느껴진다. 북한 지도자들이 국제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이성적으로 따져볼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정권의 생존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파괴를 촉발하는 도구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억지 능력이 역사적인 전례가 있음을 우려한다. 1964년 마오쩌둥의 중국은 첫 핵무기를 시험하였다. 마오쩌둥이 공산당 최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벌인 사회 전체의 격변인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이 2년 뒤에 시작되었다. 폭력의 난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출처에 따라 수십만에서 2천만에 이르며 수천만 명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기소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가는 몇 년간 혼돈 속에 빠졌다 (Strauss and Southerl, 1994).^a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역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4,000명 이상의 칭하이 연구센터 직원들이 기소되었으며 40명 이상이 자살하고 다섯 명은 처형되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처음 핵무기를 얻게 되자 현대사에 전례 없는 광기가 펼쳐진 것이다. 비이성적이고 총동적이며 통제를 벗어난 인물이 핵무기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걱정된다면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

중국의 첫 원폭 시험 전에 중국의 핵 보유가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중국의 정책은 계속 조심스럽고 이성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기회를 통하여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Blachly et al., 1962, p. v).

"조심스럽고 이성적"이라는 말은 분명히 문화혁명기의 중국을 지켜본 이들이 중국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광기가 고조되는 중에 중국은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얻었다. 중국은 혁명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열 번의 핵실험을 했다. 중국은 핵분열 무기와 미사일 핵탄두 운반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미국 정부의 일각에서는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을 옹호하였으나 미국은 결국 공포나 제재, 전쟁 위협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이 핵 강대국으로 대두될 때, 그리고 문화혁명이 잦아들기 시작할 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첫 재임기에 워싱턴은 베이징을 포용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1978년 미국은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함으로써 그 과정을 마무리했다.

1970년대 냉전기와 현재의 국제 역학 관계는 상당히 다르며 북한은 중국이 아니다. 하지만 마오쩌둥 중국의 행동은 분명히 불안정하고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비이성적이었으며 북한이 도달한 적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면 세계의 안보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들이 북한을 관리하고 억지하도록 격려해야 함을 입증했다.

^a 일반적으로 문화 혁명은 1976년에 끝난 것으로 여겨진다.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기: 진전 방안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2006년 시작된 제재 때문에 세계는 1990년대 후반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제 핵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고 핵무기를 갖추었다. 같은 전략을 지속한다면 분명히 같은 결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양국 모두에 잠재적으로 위협한 막다른 길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바마 정부의 아무 것도 주고 받지 않는다는 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모 아니면 도 접근법 사이에는 분명히 절충안이 존재한다. 이 절충안은 무언가를 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미국의 협상 전략인 무언가를 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접근법은 미국에 대한 위협 감소와 한반도 안정화라는 목표를 향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하기 위해 양측이 의미가 있지만 되돌릴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첫 단계로 미국과 동맹국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유지하면서 북한 경제에 가장 심각한 일부 제재 조치, 특히 농업 분야의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⁶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이 우라늄 농축 시설과 같은 일부 핵심 핵시설을 방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어떤 단계도 양측의 현재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지만, 요점은 **상대가 그러한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이므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되며 추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해체를 향한 북한의 불가역적 조치를 원했던 기존 미국의 요구와 상반된다. 한쪽이 상대가 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철회할 수 있다. 평양은 사찰단을 추방할 수 있으며 워싱턴은 다시 제재 조치의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있다.⁷ 실제로 제재를 완화하는 유엔 결의안의 문구는 유엔이 두 번째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원되도록 마련할 수 있습니다.⁸

이러한 점진적으로 대가를 주고 받는 거래를 하게 되면 보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진전을 전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깊은 의심으로 얼룩진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실패하더라도 워싱턴이 현재 접근법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협상 전략인
무언가를 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접근법은 양측이
의미 있지만 되돌릴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김정일 정권을 상대하기 위해 이 접근 방식이나 다른 접근 방식으로 진전의 전망을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비협조적이고 변덕스러운 협상 파트너이며 그 과정은 첫 단계에서 끝나거나 구상 단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단계를 최소한 전망이라도 해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안을 강화하거나 핵무기 물질이나 노하우가 국외로 확산될 가능성을 줄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교류가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천천히 가열되는 무기 경쟁을 억제하는 합의도 생각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협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상대하기에 덜 적대적인 정권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다는 허구는 워싱턴의 도그마가 되었다. 오랜 기간 여러 대통령이 평양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 안보에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 된다는 선언을 한 후 북한의 핵을 용인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미국 지도자들에게 불편할 것이고 최근의 미국 외교 정책에서 나타난 극적인 반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과 동아시아의 안보에서 진전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우화 같은 기대나 가정을 토대로 건전한 정책을 입안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불가능한 목표에 계속 집중하는 것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만 만들 수 있다. 명료한 시각과 현실적인 기대로 북핵에 접근하는 것만이 평양의 핵 야심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평화가(때로는 불안하긴 하지만) 지속되도록 하는 데 미국의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 1 미국은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와 관련하여 제재 조치를 취했다.
- 2 그렇다고 두 나라가 서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과의 다국간 핵 협정(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서 탈퇴하는 것은 워싱턴 측이 행정부가 바뀌면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 3 미국 해군대학의 Terence Roehrig이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 최소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을 제안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 4 물론 의사결정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환상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비확산 체제 옹호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란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비핵화를 지지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경우 두 나라 중 하나 또는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유 중 어느 것도 사소하지 않지만,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이유는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와 같지 않다. 조만간 모든 당사자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현실에 따라 대응해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해준 Terence Roehrig에게 감사를 표한다.

- 5 북한이 핵무기를 노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예컨대 통일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남한의 양보를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소 과장된 우려일 수는 있지만, 핵보유국이 역사적으로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더욱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환상은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서방의 전략이 비현실적인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준비가 미비하게 될 것이다.
- 6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와 2397호에 따라 북한의 석유화학제품 및 기계 수입 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농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쳤던 이러한 제한(Smith, 2020 참조)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 7 일각에서는 제재가 완화되면 다시 제재를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향한 이 첫 잠정적 조치의 조건마저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평양의 호전성을 과시하고 아마도 훨씬 더 가혹할 제재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바랄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일 것이다.
- 8 이 점에 대해서는 랜드 연구소의 동료 Rafiq Dossani에게 감사를 표한다.

참고자료

Bartlett, Jason, and Francis Shin, “Sanctions by the Numbers: Spotlight on North Korea.(숫자로 본 제재 조치: 북한 조명)”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February 8, 2021.

Blachly, R. L., L. Gouré, S. T. Hosmer, A. L. Hsieh, B. F. Jaeger, P. F. Langer, and M. G. Weiner, *Implications of a Communist Chinese Nuclear Capability: A Briefing*((공산주의 중국의 핵 능력이 갖는 의미: 브리핑),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RM-3264-PR, August 1962. 2021년 10월 12일 현재:
<https://nsarchive.gwu.edu/document/20325-national-security-archive-doc-6a-r-1-blachly-et>

Brooks, Risa A., “Sanctions and Regime Type: What Works, and When?(제재와 정권 유형: 무엇이 언제 작동하는가?)” *Security Studies*, Vol. 11, No. 4, Summer 2002, pp. 1–50.

Drezner, Daniel W., “How Smart Are Smart Sanctions?(똑똑한 제재 조치는 얼마나 똑똑한가?)”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5, No. 1, March 2003, pp. 107–110.

Einhorn, Robert, “The Rollou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Review Leaves Unanswered Questions.(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개 검토가 남긴, 답을 구하지 못한 질문들)” Brookings Institution, May 4, 2021.

Gambino, Lauren, “Donald Trump Boasts That His Nuclear Button Is Bigger than Kim Jong-un’s.(도널드 트럼프, 자신의 핵 버튼이 김정은의 버튼보다 크다고 자랑하다)” *The Guardian*, January 3, 2018.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 (중대 목표: 제재와 유인, 그리고 북한의 사례),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Jackson, Van, “The Rebalance, Entrapment Fear, and Collapsism: The Origins of Obama’s North Korea Policy, (재균형, 함정에 대한 공포와 붕괴주의: 오바마 북한 정책의 기원)” *Asian Security*, Vol. 43, No. 4, Fall 2019, pp. 593–619.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전망 이론: 위기 발생 시의 결정 분석)” *Econometrica*, Vol. 47, No. 2, March 1979, pp. 263–292.

Lewis, John Wilson, and Xue Litai, *China Builds the Bomb* (중국은 폭탄을 만든다), Palo Alt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Brussels Summit Communiqué, (브뤼셀 회담 발표)” Brussels, June 14, 2021.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North Korea (PRK) Exports, Imports, and Trade Partners,(북한 수출, 수입 및 무역 파트너)”
웹페이지, 날짜 미기재. 2021년 10월 11일:
<https://oec.world/en/profile/country/prk>

O’Carroll, Chad, “‘Quad’ Leaders Commit to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but Not Peninsula Peace, (한반도 평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논의한 ‘쿼드’ 정상 회담)” *NK News*, 2021년 3월 12일

Rarick, Charles A., and Thaug Han, “Economic Sanctions Revisited: Additional Insights into Why They Fail,(경제 제재 조치 재개: 실패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 *Economic Affairs*, Vol. 30, No. 2, June 2010, pp. 68–70.

러시아 연방, 영국 및 북아일랜드, 미국,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 가입에 대한 안보 메모)” 부다페스트, 1994년 12월 5일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무기와 영향력),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6.

Smith, Hazel, “The Ethics of United Nations Sanctions on North Korea: Effectiveness,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국제연합 북한 제재 조치의 윤리: 효과와 필요성, 비례 원칙)” *Critical Asian Studies*, Vol. 52, No. 2, May 2020, pp. 182–203.

Strauss, Valerie, and Daniel Southerl, “How Many Died? New Evidence Suggests Far Higher Numbers for the Victims of Mao Zedong’s Era.(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마오쩌둥 시대의 희생자 수가 훨씬 높다는 새로운 증거의 등장)” *Washington Post*, 1994년 7월 17일

백악관,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발표)” Sentosa Island, Singapore, June 12, 2018.

———, “U.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U.S.-Japan Global Partnership for a New Era,’(미-일 정상 공동 발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 Washington, D.C., April 16, 2021a.

———,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합동 회의 연설)” Washington, D.C., April 28, 2021b.

———,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한-미 정상 공동 발표)” Washington, D.C., May 21, 2021c.

Whong, Eugene, “North Korean State Agencies ‘Officially’ Resume Smuggling Goods from China,(북한 정부 기관 ‘공식적으로’ 중국 밀수 재개)” trans. Leejin Jun, Radio Free Asia, April 22, 2021.

저자 소개

David Shlapak 는 RAND Corporation 의 선임 국제 연구 분석가이다. 그는 특히 대테러 및 핵 전략 연구를 주도했으며, 지난 20 년 동안의 주요 연구 분야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강대국 경쟁 무대への 복귀를 위해 미국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Shlapak 은 정치학 학사 학위를 갖고 있다.

감사 인사

본 저자는 RAND 의 Karl Mueller 와 미국 Naval War College 의 Terence Roehrig 께서 본 논문 초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본 Perspective 소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실패한 접근방식을 이어갈 것이라는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실패한 계획을 고집하는 대신 미국과 동맹국들은 "무언가를 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전략을 채택하여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평양의 핵 능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자금 지원

본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은 랜드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CAPP) 자문위원회 기부금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본 연구는 랜드 연구소 국제 프로그램의 일부인 CAPP에서 수행하였습니다. CAPP는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정책 문제에 다학문, 분석, 지역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CAPP의 사명은 의사 결정권자와 대중에게 아시아 및 미국-아시아 관계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rand.org/capp 을 방문하시거나 센터 디렉터에게 문의해주시시오 (연락처 정보는 웹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전세계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더 크게 번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연구 기관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 기구로, 공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연구 정직성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정책과 의사결정 개선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사명은 품질과 객관성이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와 최상의 정직성과 윤리적 행동을 위한 확고한 노력을 통해 실현됩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치우치지 않는 연구와 분석을 위해 우리는 연구 간행물의 철저하고 정확한 품질 확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또한 직원 교육과 프로젝트 선별, 필수 공시 정책을 통해 이해 상충의 실제 발생 및 발생 의심 사례를 모두 방지합니다. 우리 연구 결과와 제안의 공개, 발표된 연구의 자금 출처 공개, 지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우리 연구 참여의 투명성을 추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rand.org/about/principles 를 방문해주시시오.

랜드의 간행물은 연구 의뢰자 및 후원자의 의견을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RAND®은 (는) 등록 상표입니다.

한정 인쇄 및 전자 배포 권리

본 문서와 본 문서에 포함된 상표는 법률로 보호됩니다. 본 랜드 연구소 지식재산의 표현은 비상업적 용도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본 간행물의 온라인 무단 게시를 금지합니다. 본 문서의 복제는 변경을 하지 않고 완전하게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용으로만 허용됩니다. 본 연구소의 연구 문서를 상업적인 용도로 복제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재사용할 경우 본 연구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인쇄 및 링크 권한에 대한 정보는 www.rand.org/pubs/permissions.html 을 방문하여 확인해주시시오.

본 간행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rand.org/t/PEA1495-1 을 방문해주시시오.

© 2021 RAND Corporation



www.rand.org